

국토

KRIHS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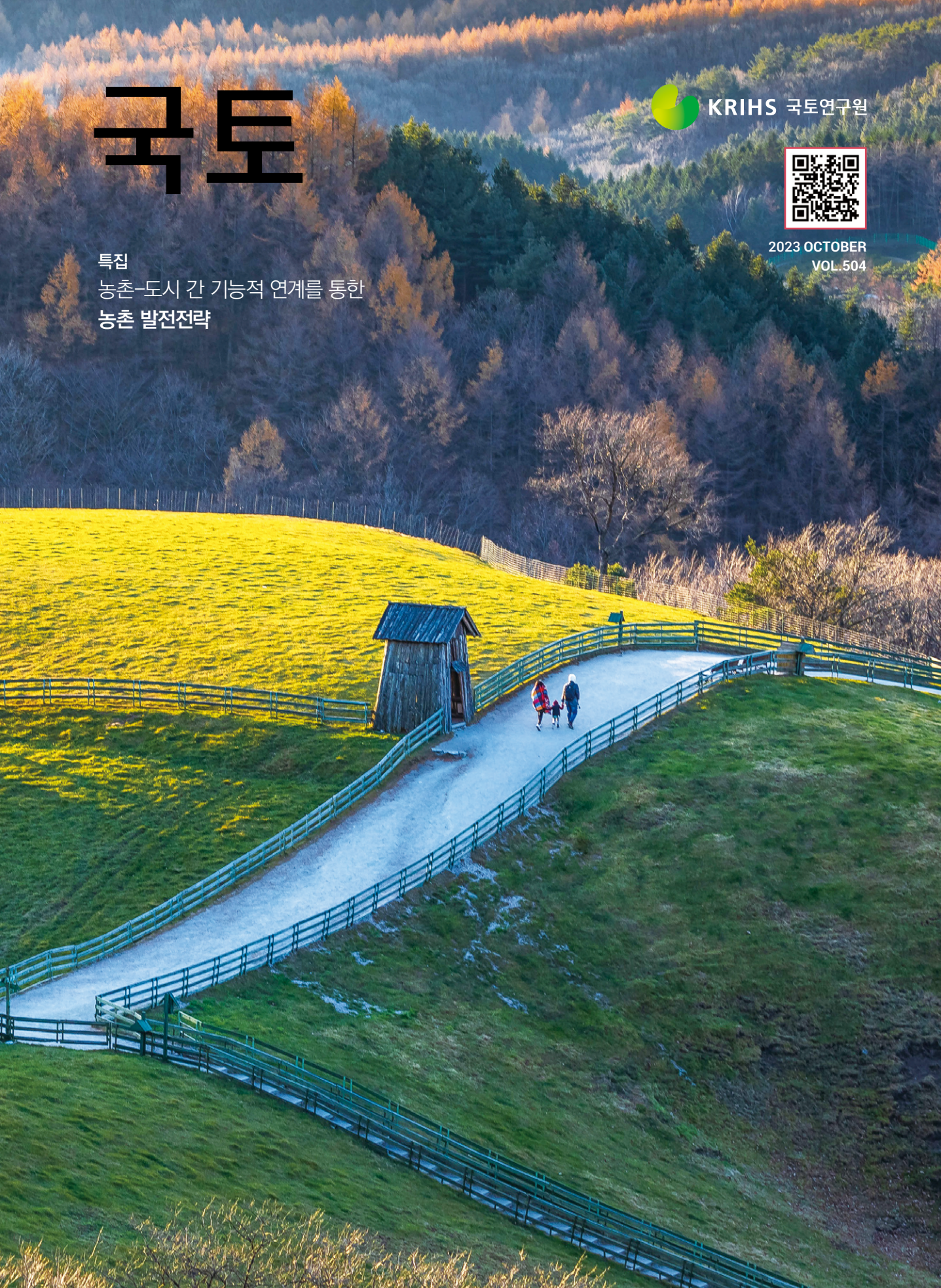


2023 OCTOBER
VOL. 504

특집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전략



CONTENTS

VOL.504

OCTOBER 2023



표지 이야기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대상으로 선정된 신동하님의 '아름다운 소풍길'입니다.
(촬영자: 강원 평창군)

발행일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심교언

편집위원장 김영수

편집위원 김민아, 김수진, 백정환,

손재선, 윤은주, 이길제, 이치주,

조미향, 조성철, 황관석

(가나다순)

편집 유자은

전화 044-960-0114(대표)

044-960-0426(구독문의)

디자인 문화공간



02 국토시론

농촌정책 전환: 지방소멸론을 넘어 농촌다움에 기반한 미래 농촌 재생으로
손용훈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 위원

특집 |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전략

06 ①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 필요성 및 국외 논의

이차희_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11 ② 농촌정책의 농촌-도시 간 연계 노력과 과제

백승석_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차장

17 ③ 농촌-도시의 연계 수요: 관계인구와 유연거주

장민영_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24 ④ 미래의 농촌-도시 연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박기현_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1 ⑤ 해외 농촌-도시 간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전략 사례:

유럽의 스마트 빌리지

김상희_ Urban Regeneration Plus 소장

38 용어풀이 <301>

농촌발전, 기능적 연계

정유진_ 국토연구원 연구원

40 KRIHS가 만난 사람 <73>

농촌-도시 상생으로 농촌활성화

농촌공간조성정책 추진해 지역소멸 대비

김창길_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48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22>

만원 빅데이터와 통계청 전출인데이터로 인구이동 읽기

장요한_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40



- 56 골목기행 <22>**
낙후된 마을, 새롭게 태어나다
천안 미나릿길벽화마을
김효정_작가

- 66 문학과 공간 <34>**
속초에서 마주한 자아정체성
속초에서의 겨울
손유찬_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연구센터 연구원

- 72 서평**
부동산에서 성공하기: 디벨로퍼로 시작하기
(존 맥네리스 편저)
짧지만 굵은 부동산 투자 · 디벨로퍼 입문서: NTMO이 핵심이다
문정호_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75 연구자의 서가 <64>**
우주 그리고 인간 (이영욱 지음)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홍사흠_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 78 글로벌정보**
해외 농촌-도시 연계 정책 동향

- 80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외

- 81 기자칼럼**
농촌문제의 전 국민적 의제화가 도 · 농 통합발전의 디딤돌
이광조_한국영농신문 편집국장



- 82 KRHS 보고서 서평**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안소현 외 지음)
이원도_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
(최예슬 외 지음)
조희정_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86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 89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이영주_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_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농촌-도시 상생으로 농촌활성화 농촌공간조성정책 추진해 지역소멸 대비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소멸’, ‘고령화’, ‘낙후된 지역’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촌이 새로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2월 농어촌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소멸, 농촌 난개발, 복지전달체계의 약화 등에 대비하고 있다”며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과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공간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 이차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cha0324@krihs.re.kr)

이차희(이하 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협의하고, 심의·의결을 통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농어촌분과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길(이하 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농식품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수산·미래산림·미래신산업·미래기술·농업세제개선 등 5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2002년 1월 설치돼 2009년 12월까지 운영됐습니다. 이후 2018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이를 기초로 농어업위가 2019년 4월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2년 12월에는 제3대 장태평 위원장 취임 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여섯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둘째,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셋째,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넷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다섯째,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여섯째,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어업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두 부처의 현안 이슈보다는 다루기 힘든 큰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된 다부처의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개발·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최근 정부의 농어촌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현재 농어촌정책은 지역소멸, 농촌 난개발, 복지전달체계의 약화 등에 대비해 농촌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중 첫째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을 주거·융복합산업·관광·재생에너지 지구 등으로 특화하는 등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2023년 7월,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김창길

“

농촌 취약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 개량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 빈집 등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목재친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통합 지원이 있는데요.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이행하면, 정부는 통합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지난해 32개에서 올해는 53개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올해 6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중 핵심은 농촌특화지구 제도의 도입입니다. 농촌마을 보호지구(유해시설 건축 금지),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구를 만들어 농촌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활용한 농촌재생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농촌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상품개발을 지원합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캠핑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취약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 개량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 빈집 등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목재친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촌의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정책과 농업·산림치유를 연계해 국민 건강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확대·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촌의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1월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방문 진료 등 농촌형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등이 연대·협력하여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정책과 관련하여 농어촌분과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안건들은 무엇인지요?

김 농어촌분과위원회의 핵심 어젠다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자리와 삶과 심이 보장되는 스마트농어촌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최근 귀촌하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스마트농어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및 농어촌마을이 협업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별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농산어촌형 공간디자인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형 공간디자인은 농산어촌 환경을 고려해 이에 맞는 좋은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도시 중심의 공간디자인 개념을 벗어나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 농촌 공간디자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립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립한 이후에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농촌공간디자인이 농촌공간계획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농어촌 소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소멸 예정 지역은 89개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농어촌이 많습니다. 농어촌 소멸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소멸은 좋은 용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멸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라서 농촌의 종속 등 대체할 다른 용어도 논의되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멸에 관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및 유럽의 해외 우수 사례 등도 조사해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역할을 구성해 차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내년까지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삶의 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인프라 등 삶의 질이 낮은 편입니다. 최근 OECD가 '더 나은 삶의 질 지표'를 발표했는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28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국의 농업과 관련된 시·군의 점수를 체크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년 2월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과제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 보건복지 분야, 문화 공동체 분야, 환경안전 분야, 지역 회복 분야 등 각 파트별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4개의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특히 농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시대 농어촌지역의 발전방향은 인구성장시대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위원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한 농촌활성화의 중요성을 ‘신 균형발전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시대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는 등한시한 채 물리적 시설의 공간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장소로서 농촌에 대한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의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분산 거주 확산, 농촌을 무대로 한 자아실현 움직임 증대 등 트렌드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불균형도 시정하도록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광역 단위의 균형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여건을 교정할 수 있는 생활권과 마을 단위 등 다차원적인 균형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산업, 경제활동 등의 공간적 분배가 기준이 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행복추구 및 자아실현 기회를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 공동체와 조직, 현장 활동가 등 다주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정주인구(stock)를 넘어 교류인구·관계인구(flow) 확대까지 고려한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 균형발전정책 접근에 따라 이하의 5대 전략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으로 도시와 농촌,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농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해 삶·일·쉼이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의 인구 변화 및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따라 주거환경과 생태·경관·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립적인 농촌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활동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전문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농·귀촌정책을 확대하여 농촌 거주나 다양한 농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지원하는 시책을 도입하여 도농 상생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재생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정책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어촌 정책과 OECD의 농촌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위원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 제가 의장을 맡았던 농업환경합동작업반(JWPAE,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은 1993년에 설립되어 농업환경지표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녹색성장 등 환경과 연계된 농업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JWPAE에 2001년부터 2017년 말까지 17년간 한국 대표로 참여하였고, 2010년부터 부의장 5년, 2014년부터 의장 4년을 역임하였습니다. 모든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기반의 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Rural Domestic Preparedness Consortium)에서 다루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대적 농촌개발정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농촌정책작업반(WPRUR, The Working Party on Rural Policy)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 농촌정책의 원칙은 지난 20년간의 농촌개발에 대한 OECD의 노력을 구체화한 것으로, OECD 회원국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정책 원칙은 특히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글로벌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정책도 기후변화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농업 분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인 다든지, 기후변화 적응을 한다든지 등의 원칙도 농촌이 함께 참여해서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행동 프레임워크를 짜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의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지속가능성 측면 등에서 도시와 농촌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시민들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 대상(scale), 전략(strategy),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대상'은 농촌지역의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자는 것과, 지역 규모에 따라 정책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것,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한 농촌, 포용적인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정책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세계화, 무역화 및 디지털화한 농촌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이 정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농촌정책과 연계하고 농촌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적으로 농촌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설계, 실행에 있어 포괄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독립적인 평가, 책임성 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OECD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농어촌 관련 국토부 관계자와 연구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는 ‘농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도시와 비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농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도시 중심적인 사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도 우리 국토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OECD, EU 등 해외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OECD와 EU의 지역균형 발전에는 농촌-도시 간의 연계를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OECD는 농촌지역을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로 특정화하여 도시와의 연계가 농촌의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자생력과 다양성이 낮은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에서 도시와의 연계 확대는 농촌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새로운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거버넌스를 핵심 주체로 선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농촌정책 3.0(Rural Policy 3.0)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 국가도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행정구역의 넘어서는 다양한 기능지역을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도시와 비도시로 나누고 농촌은 시혜적·종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국토 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건강·문화 서비스 제공 등으로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 근접성이 높아 도시와의 연계와 파트너십을 활용한 농촌 발전전략 모색의 유효성이 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도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도시민을 불러들여 고용의 장이나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로 연결하는 것이 농촌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도시 교류의 노력이 도시민의 이주 또는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농촌과 도시의 교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에서의 관광이나 교육, 복지 등에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농산어촌의 소득·고용의 확보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정책개발이 긴요한 때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농촌-도시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지역 설정도 중요합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등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에서도 지방소멸 대응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되어 올해 개원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인구성장시대에 맞춘 지역개발과 국토 균형발전이었다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해 연구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소멸 어젠다’가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전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협동연구과제로 4년 동안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였는데, 국토연구원도 참여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토피아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대표적인 저서인 『유토피아』(1516년)에서 유래되었고, 그리스어로 이 세상에 ‘없는 곳’이지만 ‘좋은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된 이상향을 지칭합니다. 유토피아는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일 뿐 실현될 수 없거나 발견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 세대는 물론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입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이 국토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농촌공간계획 등의 분야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연구로 농어업위와 농촌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알찬 연구 성과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과도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동연구를 통해 농촌 발전과 함께 국토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